

트럼프의 '신팽창주의' 행보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대책

2025. 4. 7. (월) 정책실 연구위원 이 윤 식

- 트럼프는 '신팽창주의' 행보를 통해, 자국 이익 최우선 방향으로 국제질서 재편 추진
 - △그린란드 매입 시도, △파나마운하 통제권 재확보, △캐나다, 美 51개주 편입 주장, △가자지구 개발 계획 발표, △러-우전쟁 종전협상에서 친러 행보 등
 - 한반도 안보 지형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바, 대책 마련이 시급
-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급 영향 및 향후 대응책
 - ① 한미동맹, '안보 중심'에서 '비용부담 중심'으로 재조정 가능성 → △한미 경제안보와 연계한 방위비 협상력 증대, △자주국방 역량 강화 및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
 - ② 향후 미북 협상시 '한국 패싱' 우려와 미-북-러 밀착 가능성 → △한미동맹의 '對中 견제' 관련 전략적 가치 부각, △한미일 3국 협력의 경제·군사 동맹 격상 추진
 - ③ 러-우 종전협상 사례 참고한 北 오판 가능성 → △국지 도발시 강력한 보복 타격체계 구축(북핵시설 선제타격 포함), △한미 연합군의 선제적 억제 실행력 확보
- 대응 방안: △락방향 명확화(한미동맹 기반한 역량 강화), △실용적 대응전략(대미 외교라인 다층화, 경제안보와 방위산업 연계, 국제 다자외교 역량 확대)등

1. 서론: 트럼프의 대외정책과 국제질서 재편

-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이후 '미국 우선주의(America First)'에 기반한 국제질서 재편을 위해 '신팽창주의 대외정책'을 추진 중
 - △그린란드 매입 시도, △파나마운하 통제권 확보, △캐나다, 美 51번째 주로 합병 주장, △가자지구 개발 계획 발표, △러우전쟁 종전 협상에서 친러 행보 등
 - 이는 단순한 영토 확장 및 군사 점령을 통한 패권 추구가 아닌, 경제적·전략적 영향력 확대와 '강압 외교'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패권전략 추구를 의미
 - ※ 강압 외교(coercive diplomacy): 외교 협상뿐 아니라 군사 위협, 정치적 압박, 경제 제재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상대의 행동을 바꾸려는 전략(*주: 미어샤이머 『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』 참조). 트럼프식 외교에서 자주 활용
-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전통적 동맹 역할 재조정 및 양자 협상 등을 통해 미국의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, 이런 흐름 속에서 한반도 안보 지형도 근본적 변화에 직면

- 최근 러-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 트럼프는 유럽 동맹국들과 우크라 입장보다는 오히려 러시아 편향적 행보를 보이며,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짐
- 우리 입장에선 향후 미북 협상시 한국을 '패싱'하고, '트럼프-푸틴-김정은 브로맨스'로 미·북·러 밀착이 형성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폭

○ 본 보고서에선 트럼프식 신팽창주의에 대해 살펴보고, 이런 행보가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한 후, 관련 대응책을 제시

- 특히, 트럼프의 신팽창주의로 야기될 수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, 미북협상 재개, 북한 전략적 도발 등 복합안보위기 시나리오 관련 선제적 대응전략 제시
- 향후 당의 외교안보정책 기반과 '맞춤형 대비책'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

2. 트럼프의 신팽창주의와 국제정세 변화

□ '신팽창주의'의 개념과 특징

○ 트럼프표 '신팽창주의'(Neo-expansionism)는 '미국 우선주의'(America First)를 더욱 확장시킨 공격적 대외정책 기조

- 기존 팽창주의(expansionism)가 영토 확장과 군사적 점령 등을 통한 강대국의 패권 확대에 초점을 둔 제국주의적 특성의 대외정책 기조라면,
- 트럼프의 신팽창주의는 군사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경제·전략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, '강압 외교'를 통해 자국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방식으로 전개
- 즉, △경제적 자원 확보 및 독점, △지정학적 요충지에 대한 통제권 확보, △정치·군사적 우위 확보를 통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구축이 핵심

○ 특징은 △NATO·UN 등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축소, △양자 협상(deal making) 선호, △경제적·군사적 실리 우선 외교, △지정학적 요충지 통제 등

- 국제 규범 및 가치에 기반하기보다 '강한 미국' 중심의 일방적 조치를 중시하고, 동맹국과의 협력보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

□ 주요 사례: 신팽창주의의 현실적 적용

① 그린란드 매입 추진

- 2019년 트럼프는 덴마크령 그린란드 매입을 공식 제안했고, 이번 상·하원 합동 연설(3.4)에서도 그린란드 매입을 재차 강조

- ※ 트럼프, “국가안보를 위해 ‘어떻게 해서든(one way or another)’ 그린란드가 필요”
- 그린란드는 희토류·석유 등이 풍부하며, 미국의 북극권 군사거점 확보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(*1867년 알래스카 매입과 유사하게 접근)
- => 현재 덴마크 정부는 강력 반발하며, 그린란드 방위비 대폭 증액 조치를 발표

② 파나마 운하 통제권 재접수 주장

- 취임 후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재접수하겠다고 발표. 3.4(월)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도 강조
- 중국이 파나마 운하 물류 인프라에 투자하면서 미국이 영향력을 잃게 되자, 해상 패권 유지 및 글로벌 공급망 장악을 위한 전략적 조치로 진행
- => 파나마는 트럼프 행보를 주권 침해로 간주해, 국제사법재판소(ICJ) 제소 시사

③ 캐나다의 美 51번째주 합병 발언

- 캐나다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(2023년 기준 무역액 약 7,900억 달러)이며, 풍부한 오일샌드, 천연가스, 광물 자원을 보유
- 트럼프는 2.20(목) "캐나다를 美의 51번째 주로 만들 수 있다" 발언. 이는 경제적·전략적 블록화 강화 의도가 내포된 발언
- => 캐나다 정부는 즉각 반발. “일고의 가치도 없다”며 주권과 영토 보전을 위해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발표

④ 가자지구 개발 계획

- 2.6(목), 트럼프는 이스라엘-팔레스타인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를 '지중해 최대의 휴양지'로 개발하겠다고 발표
- 이는 전후 경제 재건 명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강화하고, 팔레스타인 문제를 경제적 이익 관점에서 재편하려는 시도로 평가
- => 주요 아랍국(사우디, 요르단, 이집트 등)은 “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것”이라며 강력 반발 중인 상황

⑤ 러-우전쟁 종전 협상에서 친러시아 행보

- 출범 후 트럼프는 푸틴과 양자 협상을 통해 러-우전쟁 종전에 나서면서, 유럽 주요국들의 반발 및 NATO 내부 균열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초래
- ※ 트럼프 조건: △우크라 NATO 가입 불허, △러시아 점령지 인정, △우크라 광물 자원(리튬, 니켈 등) 확보 대가로 종전 추진, △서방 무기 지원 중단 등
- 특히, 최근 미·러가 ‘30일 제한적 휴전(3.18)’에 합의했으나, 이 역시 휴전 대상, 휴전 기간 및 조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여, 전면 휴전까진 큰 난항이 예상

3.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 및 대책

□ 한미동맹의 전략적 재조정 시나리오 및 파급영향

○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 시스템을 재조정하고, 미국의 전략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큼

- 러-우 종전 협상에서도 유럽 동맹국보다 자국 실리를 최우선 하는 것을 볼 때, 한미동맹도 '안보 중심'에서 '비용부담 중심'으로 재조정 배제 불가

○ 시나리오 ①: 주한미군 주둔 유지 + 방위비 분담금 증액

- 트럼프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해 현행대로 유지하되, 방위비 분담금 2~3배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음 (현재 13억 달러 → 30~40억 달러 요구 예상)
- 이 경우 △우리의 재정적 부담 증가, △동맹 피로감 증대 여론 확산, △동맹의 질적 변화 발생 등의 파급 영향 초래

⇒ 대책: △경제안보 기반의 안보동맹 강화(즉, 반도체·배터리·조선 등 주요 산업에서의 對美 기여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), △한미일 안보협력체와의 연계 강조, △주한미군이 역내 전략적 유연성 확보 수단임을 강조

○ 시나리오 ②: 주한미군 일부 감축 + '전략적 유연성' 확대

- 주한미군 병력을 일부 축소(현재 2만8500명 → 2만명 이하 감축)해, 이를 對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유연성에 활용할 가능성
- 주일미군 및 괌·하와이 주둔 미군과 연계해 한반도 방위 개념 재편을 시도
- 이 경우 △한미연합작전의 효율성 저하 우려, △한국軍 주도의 대응역량 강화 요구, △한미동맹 약화 프레임 확산 가능성 등의 파급 영향 발생

⇒ 대책: △對中 견제의 전략적 거점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강조, △한국 주도 작전역량 강화 및 K-방산 고도화, △정밀 타격전력(초음속 미사일, F-35A) 확보 가속, △美 전략자산(B-2, B-52, 핵잠수함) 한반도 순환배치 유지 등

○ 시나리오 ③: 주한미군 철수 및 한국 자주국방 전환 요구

- 트럼프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핵심 공약으로 삼을 경우, "한국의 독자 핵무장 및 자체 방위력 강화 요구"로 이어질 수 있음
- 한국 내 미국 전략자산 배치 재검토 및 핵공유, 전술핵 재배치 논의 등 확대

- 이 경우 △한미동맹의 근본적 해체 논쟁 초래, △동북아 세력균형 재편 가능성, △한국 내 자체 핵무장 논의 급부상 등 파급 영향 발생

⇒ 대책: △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공유 체제 도입 추진, △최소한 <한미 원자력협정> 개정을 통한 일본 수준의 핵역량 확보, △AI 기반 차세대 무기체계 투자 및 전략무기 개발 본격화 등

□ 미·북·러 3자 협력 가능성과 ‘한국 패싱’ 우려

○ 트럼프는 러-우전쟁 종전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에 편향적 태도를 보이며, 유럽 동맹국과 갈등과 균열이 점증

- 이를 감안할 때, 향후 미북 협상에서도 ‘한국 배제’ 가능성 불배제

○ 전망 ①: 러북 경제협력 강화 및 대북제재 약화

- 전후 러시아가 북한에 에너지·무기·기술을 지원하고, 반대 급부로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 인력(별목공) 및 광물자원을 제공
- 이는 대북 제재망 약화와 함께 북한의 외화 수입 확대(대북제재 약화) → 북한의 군사력 강화 → 한반도 안보 리스크 고조 우려

○ 전망 ②: 한국을 배제한 미북 협상 가능성 확대

- 한국이 배제된 채 미북간 ‘비핵화 없는 평화협정’ 체결 가능성. 특히, 트럼프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‘스몰 딜’을 선호하는 상황
 - ※ ‘스몰 딜’: 북한이 추가 핵실험 및 ICBM 능력을 동결하면, 대북제재 해제 및 현 수준에서의 핵능력(보유)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
- 이는 한미 연합작전 체계의 약화 → 주한미군 위상 및 역할 변화 → 한국의 외교적 입지 축소 등의 우려

○ 전망 ③: 러시아의 대북 첨단 군사기술 지원 확대

- 미국 묵인 하에 러시아가 북한에 탄도미사일 및 정찰위성 기술 제공할 가능성
- 북한의 군사정찰위성, 다탄두 미사일(MIRV)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(ICBM) 역량 등의 비약적 성장 → 한국의 ‘핵인질’ 리스크 심화

○ 향후 대응방안: ‘한국 패싱’ 방지 및 전략적 가치 부각

- 우선, 한미동맹의 對中 전략적 가치를 집중 재조명하여, 한국이 인·태전략의 핵심 거점이자 對中 견제의 최전선 파트너임을 강력하게 부각

- 이는 한미가 단순한 안보협력을 넘어, 지정학적·첨단기술·공급망 측면에서도 필수불가결한 동맹임을 강조하는 전략적 측면을 어필
- 다음, 향후 한미일 3국 협력체를 경제·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, 미북 or 미북러간 밀월 국면이 일시 연출되더라도 한미일 동맹의 일체성을 강화
 - ※ 한미일 첨단무기 공동개발, 정보 실시간 공유 및 정찰체계의 연동, 군수지원 연계 등 3국간 군사협력 강화
 - ※ 반도체·원전·AI·조선 등 경제안보와의 상호 연계를 통해 한미간 전략산업 공동체 형성 기반을 구축
- 마지막, 한국 패싱 예방을 위한 고위급 채널 유지. 트럼프와 직접 소통 가능한 보수인사, 싱크탱크, 의원 등과의 일상적 비공식 전략대화의 유지·활성화

□ 북한의 도발 및 오판 가능성과 대응방안

- 향후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에서 일정 수준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,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이를 용인하거나 방관할 경우, 북한은 이를 대남 전략에 유리한 선례로 오판할 가능성이 있음
 -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과거 싱가포르 및 하노이 등 '정상외교 경험'을 바탕으로 대남도발 후 협상 카드를 시도할 가능성이 다분
 - 러-우 전쟁 종전 사례를 모델로 삼아, 군사도발 후 신속한 미북협상으로 이어 지기를 기대하고, 지속적으로 기회를 엿볼 것임
 - 만약 러시아의 대북 지원이 증대된다면, 북한의 대남 도발 호조조건이 조성
- 북한의 썬법 및 도발 유형
 - 북한은 저장도 국지도발(NLL 침투, 포격, DMZ 기습 등)을 통해 군사적 긴장 유발 후, 이를 미북간 협상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
 - 전략적 도발(핵실험, ICBM 발사 등)을 통해 미국의 '무대응 or 협상 유도'를 시도하며,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썬법을 작동시킴
 - 비대칭 도발(사이버 공격, 위성·GPS 교란 등)을 활용해 한미 감시·방어체계를 교란시키고, 내부 불안을 증폭시키려는 회색지대 전략도 병행 가능
- 향후 한국의 대응전략
 - 도발 유형별 신속 응징체계를 구축하고, 극초음속 미사일·정밀유도 무기 등 타격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한미연합의 선제적 억제 실행력을 확보 필수
 - 북핵·미사일 시설에 대한 사전·선제 타격 옵션을 작전계획에 구체화하여, 유사 시 '핵시설 제거 시나리오'가 즉각 발동될 수 있는 대비책 완비

- 한미 전략자산의 가시적·지속적 전개를 기반으로, 기존 핵우산을 넘어서는 핵공유 또는 전술핵 재배치 등 실질적 확장억제 수단 강화를 지속 요구

4. 향후 전략적 고려사항

-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,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△한미동맹의 전략적 변화, △미북러 연계 가능성, △북한의 군사적 오판 등 다층적 안보 리스트가 중첩되는 상황에서, 향후 외교안보전략 수립과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필수

□ 외교안보전략 방향의 명확화

- **향후 외교안보전략 방향은 한미동맹의 지속적 강화와 주한미군 주둔의 전략적 필요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함**
 - 핵역량의 자강력 제고를 포함한 모든 자주국방 역량 강화는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서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원칙 견지
 -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을 비롯한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관련 논의들은 모두 한미동맹의 강화·발전이란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함
- 아울러 상기 보수적 현실주의 외교안보전략에 기반하여 경제안보와 안보동맹을 **동시 강화할 수 있는 실용적 대미 협상력 강화방안도 마련**
 - 향후 실용적 대응전략 관련 3가지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

□ 3대 실용적 대응 전략

- **대미 외교라인 다층화**
 - 美 의회, 주 정부, 경제 및 산업계, 싱크탱크 등 행정부 이외 조직들과의 전략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
 - “워싱턴 DC 중심 외교”에서 벗어나, 지역 및 민간 등 현장 기반의 다층 외교 네트워크로 외교력의 외연 확장이 필요
- **경제안보와 방위산업 연계**
 - IRA·반도체법 등 미국 전략산업 법안과 연계해, 〈한미 경제안보 파트너십〉 강화
 - 이는 단순한 투자 유치나 무역 협력 차원을 넘어, 한국이 미국의 인·태 전략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 전략에서 핵심 동맹국으로 기능함을 의미

- 특히, 경제안보는 단순한 산업 영역을 넘어, 군사안보와 연동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, 이에 기반한 '국가 억제전략 정립'이 필요
- 또한, 방위분담금 협상시 단순 '재정 기여'에만 머무르지 않고, △한미 공동무기 개발을 통한 기술동맹 심화, △美 전략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인프라 제공 등을 연계해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

○ 국제 다자외교 역량 확대

- △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경제·군사 공동체로 격상, △나토 및 쿼드 등과의 연계 강화, △미북러 밀월 관계 차단을 위한 광역 외교전략 전개 등